

있는 저생산성을 야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는 실패하였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내부부의 국가에는 순수한 시장경제 체제도 없을 뿐 아니라 고진식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양 경제체제의 장·단점을 시대와 경제문화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이태 오르기 위해 경제체제는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最近 中共의 各種 改革조치는 이러한 시대식 큰 흐름의 한 시류로써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1949년 中國 本土를 점령한 中共은 자신의 힘으로 社會主義強國을 건설하려는 꿈을 키워 왔으나 思想에 의한 경제발전은 한계가 있었음에 수차례 좌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¹⁾

文化革命的 混亂에서 벗어나 回復과 調整의 시기로 들어선 中共은 1976년 毛澤東이 死亡한 후 四人幫을 추축으로 하는 極左세력이 극출되고, 鄧小平을 中心으로 하는 實用主義 세력의 등장을 보충해 준 것으로 評價되는 中共黨 11期 3中全會(1978년 12월)의 커뮤니케이션 통해 中共은 앞으로 全黨 黨의 中心을 農業, 工業, 國防, 科學技術 등 4個 現代化에 둔다고 진언하였다.

毛澤東 생존시의 中共은 경제운용의 탐닉성이나 전분지식(專)보다는 정치사상(紅)을 강조해 왔으며, 생산력보다는 생산 관계를 중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증강 없이는 現代化가 불가능하다는 기본인식하에 實用主義자들은 紅보다 專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대하라는 것이 생산력의 콕쑤뿐 아니라 경제의 운용방식도 현대화 내지 합리화하는 의식구조의 전환도 수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운용의 합리화에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개별경제 주체의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하게 되는데, 특히 中國과 같이 광대한 국토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의 집권화로 야기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경제운용에 관한 분권화의 필요성 인식은 調整計劃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 조정계획을 설명하여 보자.⁽²⁾

中共은 1978년 3월 5期 全人代 1차 회의에서 120個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985년까지의 투자규모가 과거 28년간의 투자규모와 같은 정도로 빙만한 소위 10개년 계획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투자재원, 전자기술인력 등의 전제적인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신빙적인 10개년 계획의 개발계획으로, 실기루 꿈과 1년만에 백지화되고 1979년 6월 5期 全人代 2次 회의에서 소성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이 조정계획을 통하여 中共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調整, 改革, 整頓, 提高」등 八字方針으로 요약 제시하였다.

中共은 1958—60년의 大躍進운동 실패 이후에도 「調整, 強化, 充實, 向[.]」이라는 八字方針에 따라 경제 조성을 실시한 바 있다.

1960년대의 소경과 비교해 볼 때 1979년 이후의 소경은 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八字方針의 개혁은 기업관리를 전문경영인 중심의 기업관리 시스템으로 개조하고 종건의 均等分配 원칙을 노동생산성에 따른 能率分配 원칙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84년 10월 20일 中共黨 12期 3中全會는 1985년부터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골기로 하는 “關於經濟體制改革的決定”(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은 비록 이것이 中共黨의 앞으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용 제시하는 文件이라는 점에서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1978년 12월 11期 3中全會 이후 전개되어 온 중국경제의 조성·개혁 방향을 제하인하였다는 점에서 현 중국의 경제개혁 주도세력인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자들의 권력기반이 더욱 확고함을 시준해 주고 있다.⁽³⁾

이 決定의 내용은 크게 10個 部門으로 나누어지 있는데, ① 改革은 中共經濟發展을 위해 긴급히 요청된다. ② 개혁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진하기 위한 것이다. ③ 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경제개혁의 중심 과제이다. ④ 가격면 기음 고려한 계획체제를 수립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⑤ 정부의

(1) 近藤康男, 「現代中國經濟論」第4章, 中國社會主義計劃經濟의 構造, 日本 農文協, pp.173—193.

(2) The China Quarterly 年, 沈成贊, 金德澤譯, 「調整期의 中共經濟」, 産業研究院 年報시리즈 제65호, (1985. 12) pp. 10—26.

(3) 申泰容, 「中共의 經濟改革의 背景과 展望」, KIET 共產圈 經濟, 제1권 제4호, (1984. 12) pp.20—30.

山内一男, 「經濟의 近代化와 調整政策의 基本問題」, JETRO 海外市場シリーズ, No.183, (1981. 7) 日本貿易振興會, pp.3—7.

기업의 역권을 분리시킨다. ⑥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충분히 환용한다. ⑦ 각종 경제책임제를 확립하고, 그중에 따른 분배위치를 권철한다. ⑧ 對內 對外的 경제, 기술교류를 강화한다. ⑨ 경제관리 간부는 양성한다. ⑩ 개혁에 대한 中共黨의 지도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本考에서는 위의 같은 그간의 농공경제 조정 및 개혁정책을 對內와 對外로 大分하여 그 內容과 問題點을 논하고자 한다.

對內 經濟體制改革은 農業面, 工業面, 企業管理面, 人事·勞動管理面으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핵심적 인 쟁점은 이윤동기 및 생산성에 따르는 분배추진과 권력분식 및 이에 따르는 책임제도의 제도개혁이 그 골자이다.

對外的인 경제개혁은 資本導人面, 技術導人面, 經濟特區 실시면, 무역제도 개혁면으로 나누는데, 대폭적인 무역개방을 통하여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사유수출지역과 같은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한편 외화공급을 늘리기 위한 무역자유 방안으로 무역제도의 과감한 개혁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 國內 計劃經濟體制的 改革

1. 農業面에서의 改革

經濟改革 以前의 中共農業은 人民公社에 의한 生産力集中과 政社合一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 시기의 農民生活은 集體部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며, 個人部門에서 생기는 소득은 資本主義的 活動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의하여 감축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는 農業部門의 失業增加와 農産物 부족 가내란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곡물 생산을 위한 국가정책도 실패하는 결과가 되었다.

1981년 현재 中共의 農村人口는 8억 2천만명(전체 인구의 약 82%)에 달하고 農業勞動力은 3억 3천만명에 이르기, 1억 8천만호를 헤아리는 農家戶數의 압도적인 多數가 人民公社의 生産隊에 소속되어 있다. 生産隊은 평균 30여호의 農家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인구는 136명 정도이다. 평균 8.4개의 生産隊가 1개의 生産大隊를 이루고, 평균 13.2개의 生産大隊가 1개의 人民公社를 형성하여, 中共의 農村에는 총 5만 4천여 개의 人民公社가 있다.⁽⁴⁾

生産手段의 所有制 形식으로 볼 때, 人民公社는 勞動群衆集團所有制(集體所有制로 略稱)로 되어 있고, 生産隊를 生産, 分配, 流通의 기층단위로 삼는 三級所有制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生産手段의 社會化, 公有化의 수준에 있어서 集體所有制는 全民所有制보다 한 단계 낮은 형태이며, 人民公社의 三級所有制는 集體所有制 중에서도 더욱 초보형태이다. 이처럼 低級 형태의 所有制는 기초로 하여 中共人口의 8월 이상이 經濟生活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中共은 低級社會主義國家라고 볼 수 있다.

中共經濟의 調整期라고 볼 수 있는 1960년대 중반(大躍進 이후의 진체기)에 農業組織의 改革은 두가지로 취하여졌는데 生産隊가 아니라 個別農家가 生産 및 經營의 主要 單位가 된 小과 私部門의 확대된 점이다. 그러나 그나 획기적인 전환은 1981년 中共黨 第11期 三中全會를 起點으로하여 農業政策의 여러가지 실험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生産力의 高度의 集中이 아니라 오히려 生産力의 극단적인 分散 형태의 일종인 請負形式의 ‘生産責任制’를 신념적으로 도입하여, 農業生産의 경영규모 차원에서는 종래 生産隊를 기층단위로 하는 人民公社의 기존 三級所有制보다도 그 社會化 公有化의 수준을 더욱 낮추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관념히 中共의 建國理念인 社會主義國家建設과 모순되는 것이니, 오늘날 특히 人民公社의 解體 設까지 대두되는 당에, 中共은 農業의 이상과 같은 遂行的 개혁방향에 대하여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이렇다 한만한 명쾌한 해석이 없는데 이는 生産力分散에 의한 農業總生産 增加가 經濟發展過程의 必然인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이 올라가 고된 中共은 초기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生産力을 단계적으로 集約하던 시기에 또 分散의 一面을 操作的 方式으로 驅使하였다.⁽⁵⁾ 특히 實用主義 剩餘力論(生産力

(4)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223. 解説 中國經濟統計, 第11章 農業全般, 1984. 5. pp.70-73.

(5) 1978-83년간의 中共農業, 調整期の 中共經濟, KIEP 번역시리즈 제65호, pp.89-91, 1985. 12.

〈表 3〉 工業部門別 工業總生産(1978—82)

단위 : 100만원

	1980년 불변가격					1982년 지수 1978=100	
	1978	1979	1980	1981	1982	경공업	중공업
금속공업 (중)	40,558	45,105	47,304	45,669	48,523	—	119.6
전력공업 (중)	16,206	17,742	18,914	19,486	20,707	—	127.8
석탄공업 (중)	15,157	15,316	14,783	14,626	15,514	—	102.4
석유공업 (중)	26,824	28,696	29,011	28,213	28,798	—	107.4
화학공업	47,648	50,993	56,494	59,143	65,901	—	—
—중공업	32,927	35,352	37,427	36,811	41,211	—	125.2
—경공업	14,720	15,641	19,067	22,332	24,690	167.7	—
기계공업	101,617	109,488	112,093	107,995	—	—	—
—중공업	81,748	87,416	84,859	76,776	88,210	—	107.9
—경공업	19,870	22,073	27,233	31,219	34,296	172.6	—
건축자재 (중)	16,599	18,046	19,578	19,507	22,258	—	134.1
목재공업	9,411	10,305	10,543	10,490	11,225	—	—
—중공업	7,011	7,510	7,102	6,487	6,832	—	97.4
—경공업	2,400	2,796	3,441	4,003	4,393	183.0	—
식품가공업 (경)	50,847	55,914	61,222	69,012	75,552	148.6	—
섬유공업 (경)	52,164	58,471	72,504	85,602	86,685	166.2	—
세지공업 (경)	5,836	6,537	6,953	6,940	7,396	126.7	—
기	38,124	40,243	47,266	51,084	52,680	—	—
—중공업	3,580	3,860	4,159	3,903	4,205	—	117.5
—경공업	34,544	36,384	43,107	47,181	48,475	140.3	—
총계	420,991	456,856	496,664	517,767	55,745	—	—
중공업	240,610	259,042	263,136	251,478	276,258	—	114.8
경공업	180,381	197,814	233,528	266,289	281,487	156.1	—

資料 : 1978—80 「中共經濟年鑑」, 1983.
1981—82 「中國統計年鑑」, 1984.

비교해 보면 다음 〈表 4〉와 같다.

勞動生産性은 시시히 올라갔고 投資의 效率도 장기간 生産의 후퇴에서 벗어나 발전되었다. 그러나 資本의 生産性은 계속 내리막길이었다. 지난 5년간 資本生産性이 急落한 것은 경·중공업 부문의 생산성이 변회되고 1978—82년간에 걸쳐 일어났던 커다란 구조변화 때문이었다. 이같은 변화의 영향은 資本生産性指數를 아래에서처럼 인수분해하면 측정가능하다.

$$\left(\frac{\Sigma Q_{82}}{\Sigma K_{82}} \right) \left(\frac{\Sigma Q_{78}}{\Sigma K_{78}} \right) = \left(\frac{\Sigma Q_{78} \left(\frac{K_{82}}{Q_{82}} \right)}{\Sigma Q_{78} \left(\frac{K_{78}}{Q_{78}} \right)} \right) \times \left(\frac{\Sigma Q_{82} \left(\frac{K_{82}}{Q_{82}} \right)}{\Sigma Q_{78} \left(\frac{K_{82}}{Q_{82}} \right)} \right)$$

여기에서 Q는 1980년 가격으로 표시된 總工業生産價値이고 K는 固定資産價値이다. 첫번째 要素의 分子는 1978년의 生産額, 1982년의 生産性水準으로 이를 生産할 때 소요되는 자본액으로 나눈 것이며 分母는 1978년의 실제 生産성이다. 따라서 첫번째 要素는 「直接生産指數」(direct productivity index) 즉 공업구조변화의 변화가 없이 자본생산성의 변화가 가져온 指數의 지수이다.

두번째 要素의 分子는 1982년의 실제 자본생산성이고, 分母는 1978년 生産額, 1982년의 生産성 수준으로 1978년의 生産額 시도할 경우 소요되는 자본액으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두번째 因子는 구조변화로 인한

〈表 4〉 總生産價値의 變動推移

단위 : %(년평균 증가율)

	1957—78	1978—82
고정자산 100원당 총생산가치	-2.0	-2.0
운전자본 100원당 "	-3.0	+1.9
고용인원 1인당 "	+2.1	+2.2

資料 : 〈表 5〉에서 산출

〈表 5〉 國營獨立採算工業企業의 실적(1978—82)

	1978	1979	1980	1981	1982	1982지수 (1978=100)
총공업생산액(백만원, 1980년)	328,012	357,486	378,318	387,545	414,666	126.4
고정자산의 원 구입가(백만원)	319,340	346,670	373,014	403,228	437,495	137.0
운전자본(백만원, 경상)	104,730	110,900	113,566	116,369	123,191	117.6
인원당 고용인원(1,000명)	29,550	30,283	31,365	32,668	34,177	115.7
고정자산 100원당 총생산액(元)	103	103	101	96	95	92.5
운전자본 100원당 총생산액(元)	313	322	333	333	337	107.2
노동자 1인당 총생산액(元, 1980년)	11,100	11,805	12,062	11,863	12,133	109.3

資料 : 총생산액은 〈表 8〉에서 산출.

고정자산 및 운전자본은 「中國經濟年鑑」, 1983. III, p. 24.

노동자 고용은 「中政統計年鑑」, 1983. p. 297.

〈表 6〉 공업구조변화로 인한 자본생산성 지수(1982년)

총	량	기	수	92.2
직	접	지	수	85.5
공업구조변화로 인한 자본생산성 변화 지수				107.8

生産性變化의 指數 즉 각 부분의 생산성이 일정했었을 경우 자본생산성의 변화가 가져올 액수의 指數이다.

〈表 5〉로부터 資本生産指數를 산출해 보면 〈表 6〉과 같다.

경공업의 자본생산성이 중공업보다 높기 때문에, 工業構造的 변화에 따른 자본생산성은 7.8% 상승해야 할 것이나 總生産性은 오히려 7.8% 감소하였다. 이는 直接指數 중·경공업 생산성을 加重平均한 것이 5년동안 14.5%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년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2년의 경우 4개기업중 약 1개의 기업은 赤字를 면하지 못한 상태이다.⁽¹³⁾

그리하여 1983년과 1984년에는 새로운 改革措置가 실시되었는데, 그 代表的인 것이 國營企業의 赤字一掃 운동, 利蝕上納制의 所得稅制로의 전환, 工場長·支配人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확대 등이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 한 예로 국영기업의 적자는 1983년에 前年對比 34.6%나 감소하였다. 개혁조치가 깊게까지 미에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끼칠 것은 확실하지만, 결국 同 改革의 成敗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 價格改革의 성공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개혁의 결과는 中共의 관료제가 政治權力에 대한 약간의 규제를 기꺼이 감수하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만일 中共의 관료제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경우 中共은 일종의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로 발전하지 못하고 中央에 의해 계획되고, 行政的인 統制가 심하며, 상대적으로 非效率的인 經濟(A centrally planned, administratively controlled, and relatively inefficient economy)로 머물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市場機能을 企業管理面이나 勞動管理面에 도입·저용함에 있어

(13) KIET, 공산권 연구, 제2권 제3호, 1985. 9. pp.184—189.

조세 증대의 큰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債의 인텔지브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셋째, 기업 투자 자금의 포탈 문제에 있어서의 개혁을 살펴보자.

종전에는 기본 건설 투자는 모두 국가의 무상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를 효율화하기 위해 은행 융자로의 전환이 시도되었다. 이 시도는 1979년 上海, 吉林, 河南의 몇개 기업들에게 실험적으로 시행되었고 1980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¹⁶⁾

기본 건설 투자의 融資施行條例는 1979년 8월 국무원에 의해 批准·公布되었다. 기본건설 용자의 기한은 重工業의 경우 최장 15년 이내, 기타 기업에서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으며, 利率는 年利 3%로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현행 기본 건설 투자외는 별도로 國家財政資金으로부터 기업에 무상으로 交付되어 오던 기업의 “잠재력 빌곤·기술혁신·설비개조” 지출에 대해서도 1981년부터 中國 人民銀行의 용자로 전환되었다. 용자기한은 일반적으로 4년 미만이며, 최장의 경우 6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利率은 일반적으로 月 0.27%이다.

또 국영 기업의 유동자금에 대해서는 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國務院이 「國營企業의 流動資金을 人民銀行의 統一管理로 바꾸는데 관한 報告」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7월부터 流動資金은 모두 은행이 공급하고 國家財政으로부터는 증가 지출이 없게 되었다.⁽¹⁷⁾

이 개혁은 첫째, 財政과 信用貸付經路의 변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資金管理를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래 국영 기업의 유동자금은 定額流動資金은 財政支出, 임시·계정저인 부분은 은행에 의해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관리를 개혁한 결과 國家의 재정 분배는 크게 감소하고, 逆으로 은행 대부자금이 증가하여 資金分配經路가 크게 변화되었다. 둘째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은행의 독자적 결정권이 높아짐에 따라 資金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셋째 이에 따라 企業의 使用資金의 공급이 일면 원활하게, 일면 절약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시급 경제개혁의 추진이 곧 각 기업의 자금수요를 일으켰고, 구분별한 기업자금 조달은 피할 한, 은행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流動性 공급은 최적 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성의 도달은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와의 마찰 문제이다. 너무 지극포탈 문제는 國家 시제의 통화량 조절 문제 및 外資 도입에 따른 國內 통화 안정 및 환율 안정 문제와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개발도상국이 모두 그러했듯이 급진적인 경제개혁이 내려지고 있는 일집년 통화수요와 그 수요증가율의 폭발적인 등장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있을 것이다.

4. 人事 및 勞動關係의 改革

나이의 人事·勞動·賃金 체계에 대한 개혁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工場長·종업원의 任命 및 선발, 賃金體系, 勞動規律 등에 대한 개혁으로 분류하여 논할 수 있다.

첫째, 工場長의 任命과 從業員의 선발에 대하여 살펴보자.

과거 기업이 국가행정기관의 부속물이었던 때에는 공장장의 임명권은 관할 행정기관에게 있었으며, 이때의 임명 기준은 공장 경영에 관한 전문 지식이니 경험보다는 경치·가상에 대한 充實性이었다. 그러나 1982년 1월 「國營企業의 工場長活動 暫行條例」에 따르면 工場長의 자격 요건은 5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思想보다는 專門知識과 경험을 중시하는 효율성 원칙의 최초의 적용으로 볼 수 있다.⁽¹⁸⁾

공정장의 선출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1) 봉건과 같이 上級の 工管單位(예컨대 縣, 市의 工業局)가 공정장을 임명, 피진하는 방식이다. 이때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노동자-직원 대표회의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임기의 인정이 가능하다.

(2) 勞動者-職工代表大會에서 선거를 통하여 工場長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3) 工場外에서 工場長을 公募하는 방식이다.

(16) 大野靜三, 「再編成をられる地方工業」, 日本國際國際研究所, 1980年代の中國經濟 第4章, 1980. 3. pp.117-134.

(17) 中國研究編, 「新中國年鑑 1984년판」, 東京, 大修館書店, pp.75-77.

(18) 大塚恒雄, 中國經濟と 勞動力問題, 第5章 中國國營企業の契約制度, 東京, 白桃書店, 1982, pp.143-158.

이렇듯 工場長이 任命되면 공장장은 기업 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데 이는 신에 없던 「工場長責任制」인 것이다.

한편 職工의 고용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부권이 인정되어 가고 있다.

당전에는 건국의 노동력이 국가기관에 의해 각 기업에 統一的으로 배분되어 왔다. 따라서 기업 자체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와 다를 경우가 흔치 않았다. 또 노동자도 해고의 임력은 없으나 전직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서빙문제 등이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硬直化的 指令性 人事·고용제도 하에서 勞動生産性이 어떠한지 따지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1980년 이래 勞動生産性 向上에 의한 經濟의 現代化를 달성하기 위하여 中共의 다수 地域에서는 公開募集採用, 選別採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¹⁹⁾

여기에서 두기할 만한 것은 기업과 職工원 사이의 계약제이다. 이는 최근에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재, 책임, 의무의 엄격한 규정으로 생산성은 제고되었으나, 失業發生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후술하겠다.

企業과 勞動者 사이의 계약은 公司(企業—工場), 工場—車間(作業單位), 車間—班·組, 班·組—個人으로 세분화되어 公司에서 個人에게까지 이르는 피라미트형의 수많은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둘째, 賃金에 對한 體系調整을 살펴보자 中共은 技術者와 管理要員에게 각각 별도의 俸給表를 적용, 8級 賃金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업종이나 기업의 중요도에 따라 상이한 임금 등급표가 사용되고 있으나, 賃率(각 등급표의 1등급 임금액)은 국가의 경제 권한에 속하며, 최근까지도 임금 인상은 단지 등급의 상향조정(昇給)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表 7〉 中共의 8級 等級 賃金表

賃金等級	1	2	3	4	5	6	7	8
等級係數	1,000	1,178	1,388	1,635	1,926	2,269	2,673	3,148
標準賃金(元)	34.0	40.1	47.2	55.6	65.5	77.1	90.9	107.1

資料 : 「新中國年鑑」, 1984년판, p.252.

노동자의 임금에는 등급표에 의해 정해지는 “標準賃金” 이외에 각종 報獎金, 手當이 있다. 報獎金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코스트로 轉嫁되는 “經常的 報獎金”과 각종의 “1回性 報獎金”의 2 종류가 있다.

경쟁적 임금은 文革 후 10여년간은 “附加賃金”의 형태로 지급되어 왔는데 최근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급 제한의 완화에 있는 바, 中共의 연간 상여금 총액은 1—2개월분의 표준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留保利潤이 과다한 경우에도 3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發明 技術向上 生産合理化를 위한 提案 原資材 절감 등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완화시키고 있다.

賃金體系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1회성 보장금의 적용일 것이다. 1回性 報獎金의 몇몇 例를 보면, 點數計算에 의한 報獎金(인사고과제도의 비슷하며 일종의 보직수당 제도를 의미), 生産高賃金(총전의 勞動時間에 비례하여 支給하던 명식음 변경하여, 生産 라인이나 工程의 구성원 등 小그룹 단위로 지급) 諾負에 의한 보정금(職場, 珠·組, 個人은 단위로 하여, 일정한 청부 임무나 조건을 정하여 그 임무의 달성 상황에 따라 보정금을 지급), 變動賃金(기업의 유보이윤 일부를 生産性에 연동시켜 지급) 등이다. 이러한 1回性 報獎金의 활용은 종래의 평균주의적인 경향을 타파하고 勞動에 따른 보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勞動規律의 強化에 대하여 살펴보자.⁽²⁰⁾

기업의 지부권 확대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수반하여 노동규율의 강

(19) 申泰容, 「中共의 經濟改革 現狀과 展望」, KIET 지역경보 시리즈 제17호, 1985. 4. p.12.

(20) 申泰容, 前제서, pp.20—22.

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노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움직임은 1982년 5월에 「全國 勞動模範 및 先進人物代表 座談會」에서 채택된 「全國從業員守則」과 같은해 4월 國務院이 발표한 「企業從業員賞罰條例」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요한 의의는, 보상으로로서의 “功績”, “大功績”의 노동경력시세의 기재, 賞金의 지급, 先進生産者·勞動模範 등 명예칭호의 수여 등과 함께 처벌로서는 경고, 과징, 중대과징의 기재, 등급의 석하, 석위의 박탈, 제명(해고) 등을 규정, 명문화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社會主義 企業에 있어서 市場機能을 거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방종현상을 규율으로써 방지하리는데 있다. 이는 黨의 정치사상교육이나 당원의 모범 행동, 그리고 집단적인 상호감독에 의한 종업원의 자각을 촉진하면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격려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法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解雇라는 행정처분이 등장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採用—解雇에 관한 인체의 재량권은 企業에 부여함으로써 生產面 뿐 아니라 人事面에서도 기기의 거주성을 확립시킨 점이다.

以上の人事·勞動·賃金面에서의改革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첫째, 「工場長責任制」는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工場長活動暫行條例」에 의하면 “長期計劃, 年次計劃, 중요한 技術改造計劃, 副工場長·技師長의 人選 등은 黨委員會의 지도를 받으며, 상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는 工場長이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규정으로 공장장과 당위원회 異見이 있을시에는 上級の 下屬單位가 裁定을 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공장장과 노동자·職員代表大會 사이의 異見發小時에도 工場의 賞委員會의 裁定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아직 黨 판로수의를 완전 탈피하기 못하는 中共의 정치 문화성향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공장장 책임제를 지향하면서 이러한 미찰을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임 것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할 것으로 시도된다.

둘째, 임금 체계에 있어서 과거 마련되었던 평년주의가 나뉘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생산성을 세량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원성화된 다음에 나타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실시가 시기상조였음은 실시 이전에도 지적했듯이, 경제발전 초기의 시나진 생산성 박잉의 임금 체계로의 移行은 자칫 소극적치를 확대시켜 社會不安을 야기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기의 생산의욕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임금체제를 개선시키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규율의 강화와 관련하여, 中共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개개인의 목표 의식이나 도덕성이 낮아, 규율강화에 의한 저극성 유도 내지는 생산성 향상이 초기의 목적을 거둘지 의심스럽다.

中共은 전국적으로 文盲 내지 半文盲 상대인 인구가 2억 4천만명에 이르르고 있으며(12세 이상 人口의 23.5%), 文盲기간 중의 고등교육 중등은 인재양성에 10년간의 공백을 의미하므로 노동자, 기업관리 요원의 평균 사질은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노동규율의 강화와 함께 기업관리요원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가 생산성 향상의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Ⅲ. 對外 經濟開放政策으로의 轉換

1. 外資導入面

역사적으로 外國資本 때문에 겪었던 쓰러진 경험과, 일부 개도국의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 및 이에 따른 세심피단 위협과 신뢰박탈을 사대불 목적으로 온 중공 당국은 外資導入政策에 있어서 신중하고도 신진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²¹⁾

中共의 外資導入은 크게 4期로 나누어 세 1기 : 경제부흥기와 제 1차 5개년계획기간(1950—57), 제 2기 : 自力更生기간(1960—69), 제 3기 : 점진적인 대외경제 개방시기 (1970—77), 제 4기 : 적극적인 외자 유치

(21) 白樞編, 「中共의 資本 및 技術導入推進과 展望」, KIET 연구보고서 제45호, 産業研究院, 1985. 3. pp.3—7.

시기(1978-현재)로 나눌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인 제4기는 제11기 全大會 三中全會에서 공식선언한 對外經濟開放政策을 통해서이다. 즉 나그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基本建設投資 등의 국가의 固定資本形成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하여 對外金融政策면에서도 보나 단력적이고 완화된 정책은 채택하게 된 것이나.

中共이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관개법령의 입법과정을 거쳐 80년부터였다.⁽²²⁾ 그러나 美國과 日本을 위시한 서방 선진 자본국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83년 外國人과의 合資企業에 대한 우대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 업체에 대한 外換管理施行細則과 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가 공포되면서부터이다. 1984년 불이와서도 特許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對外經濟關係法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과 1984년 5월의 제6기 全人代 2次會議에서 「政附工作報告」를 통해 趙紫陽이 經濟改革과 對外開放을 크게 강조한 것 등으로 미루어 앞으로 中共에 對한 外國人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 투자 유치 현황을 보자.

中共이 1979년부터 1983년 말까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은 協議額 기준으로 약 67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83년 한해동안 17억 5천 6백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表 8〉 참조).

〈表 8〉 中共의 직접 투자 유치 현황(1979—83년말)

단위 : 억달러

투 자 방 식	1982년 말누계		1983년		1979—83년말		평 균 외자규모 ¹⁾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合 資 企 業	83(35) ²⁾	1.03	105(68) ²⁾	2.37	188(103) ²⁾	3.4	181
合 作 經 營 (4.班)	792	27.3	255	2.2	1,047	29.5	282
補 償 貿 易	872	7.25	126	2.05	998	9.3	93
石 油 合 作 開 發	12	9.99	11	10.41	23	20.4	
기타(외사단특기업포함)	33	367		0.53		4.2	
합 계	1,792	49.3	497 ³⁾	17.56	2,300	66.8	

資料 : 「月刊 海外市場」, 1984. 7, p. 31.

註 : 1) 단위 : 萬달러

2) 경제특구에 유치한 합사기업의 건수

3) 기타 항목의 건수가 가산되지 않았음.

그 내역을 살펴보면, 건수와 투자액면에서 合作4.班(혹은 經營)과 補償貿易 방식에 의한 투자가 압도적 이고 合資企業 방식에 의한 外資 유치 비중은 6% 미만이다.

1983년 한해 동안의 농정을 살펴보면, 合資企業 유치 건수가 과거 4년간의 합계인 83건보다 많은 105건 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105건 중 과반수 이상이 經濟特區內에 설립되었다.⁽²³⁾

合作經營契約은 255건이 체결되어 누계로 1,047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廣東省內의 기업들과 체결된 것이다. 100% 外資企業은 이제까지는 홍콩·마카오 회교가 경제특구에 설립한 것 뿐이었 으나, 1983년부터 天津, 上海, 北京 등의 도시에 미국계 기업이 진출한 움직임도 보였고, 84년에 불이저면 시 중공이 이들 도시를 비롯한 14개 沿岸開放都市에서도 100% 외자기업을 유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 기 때문에 美國, 歐洲, 日本계 기업들의 독립현지법인 형태의 진출도 시시히 증가될 전망이다.

合作기 班이나 補償貿易 방식에 비해서 건수나 투자액면에서 뒤지고 있으나 중공이 가장 역점을 두고 유 치하고서 하는 기업형태인 合資企業 방식의 진출을 살펴보자.

1982년까지는 동양계 기업에 의한 합사기업 진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83년에는 동양계 기업의 진출은 물론이고 우리 미국, 일본 및 영국계 합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22) 1979년 7월 「中外合資經營企業法」 공포, 10월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 발포, 1980년 9월 「合資經營企業 所得稅法」 공포.

(23)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실은 바꾸어 실어야 할것임.

특히 중공은 198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들 선진제국들과 적극적으로 양국간 투자보호협정 내지 二重課稅防止協定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 미국, 일본, 독일을 위시한 선진제국 기업들의 합자기업(현지독립법인 포함)에 의한 진출은 84년 이후에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合資企業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공업, 섬유공업 및 기계, 전자, 冶金工業의 관련기업이 100개 업체로 전체의 5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表 9〉 참조). 합자기업 유치 초기에는 호텔, 시미스 및 경공업분야에 대한 진출이 두드러졌으나, 1983년에는 美國의 AMC社와 Brown & Root Engineering社, 英國의 Pilkington Glass社 및 벨기에의 Digital Telephon & IC社 등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이 기술집약적 산업에 진출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⁴⁾ 이것은 輸出産業과 함께 기술집약적 산업에 의지기업은 유치되고져 하는 중공의 외자도입 정책적 노력이 효력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地域別로는 1979—81년 사이에 특구에 진출한 합자기업이 全無하였던 반면에 특구 이외의 지역에는 40개의 합자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2—83년에는 오히려 특구에 설립된 합자기업의 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투자 및 공사가 1982—83년에 걸쳐 완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둘째로 식견 투자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적 환경정비와 함께 특구 자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들이 이 기간 동안에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蛇口工業區를 포함한 深圳特區에서는 외국기업들이 合資企業을 비롯하여 약 2,000여건의 다양한 合作契約을 체결하고 있는데 비하여 나머지 3개 특구에는 10개 안팎의 外資企業 등이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계약을 맺고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프라스트럭처와 노동력의 질 및 풍부을 비롯한 주요 경제중심지와의 연결하는 수송선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表 10〉를 보면 특구를 포함하여 3個直轄市와 廣東·福建省에 151개의 합자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중공에서 대외 경제무역 및 합작과 관련된 자주권이 가장 많이 부여된 지역들이다.

〈表 9〉 業種別 國別 合資企業 現況(協議기준)

업종별	건수	國別	1979—81년	1982년말	1983년 6월말	1983년말*
경공업·섬유	56	홍콩	21	35	67	
기계·전자	44	미국	7	11	15	22
여행·서비스	21	일본	4	4	7	12
식유화학	20	영국			5	
건설재	15	필리핀	4	5	5	
교통·제선	7	서독			1	
농·목·어업	6	프랑스	1	1	1	
식품	4	스위스	1	1	1	
기타	15	호주	1	1	1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이대리				
		노르웨이		1		
		대국		1		
		기타	1	1	2	
합계	188	합계	40	61	105	188

資料：「月刊 海外市場」, 84, 7, p. 31. *나머지 국가별로는 집계되지 않았음.

(24) 中國研究所編, 「新中國年鑑」, 1984년판, pp. 88—89.

〈表 10〉 지역별 합자기업 유치현황(실립기준)

				1979—81년	1982년	1983년	1979—83년
特 區	外 地	城		40	8	37	85
	北 京			7		5	12
	上 海			2	4	3	9
	天 津			4	2	1	7
	福 建			7	3	1	11
	廣 東			7	1	1	9
	기			12			
特 區	內 地	城			35	68	103
	深 圳	圳			9	8	
	(蛇 口)	口)					(67)

資料 : 『月刊 海外市場』, 84. 7. p. 31.

1984년에는 다시 14개 沿岸都市의 경계를 특구와 유사한 형태로 개방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외자기업 집중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²⁵⁾

以上에서 논의한 외자유지정책은 기술도입정책 및 경제특구설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외자유치에 관한 문제점과 전망은 기술도입 정책을 논한 후 기술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논할 것이며, 경제특구설치 및 무역관리의 개혁문제도 簡畵 달리하여 논할 것이다.

2. 技術導入面

中共의 기술도입정책 전개과정은 〈表 11〉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관심의 대상인 제 4기는 四人幫 축출 이후 4個 근대화 건설을 가속화한 기간으로 1978년에 공포된 경제발전 10개년 계획(1976—85)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외국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는 華國鋒의 이른바 洋躍進政策으로 이 기간중에 과거 최대의 기술도입 규모를 기록하였다. 당초 계획에는 1978—85년 8년간 총규모 65억 달러 상당의 플랜트 설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1978년에만 63억달러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과거 5년간 실적의 거의 2배이며 대부분이 현금 지급이었다. 1979년에는 이래부터 시작된 經濟調整政策과 제11기 三中全會에서의 무절제한 플랜트 구입의 비판 등으로 도입 규모는 억제되었고 도입대상도 철강, 석유화학, 석탄개발, 전력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종래의 包括契約를 지양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分割契約을 추진하는 등 많은 기술도입에 대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이 논쟁은 向後 中共의 기술도입의 기본 조건으로 될 가망이 있으므로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자.⁽²⁶⁾

첫번째 爭點은 두자의 중점을 신규설비의 확충 또는 기존설비의 안티화 개조에 둘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다. 두번째 쟁점은 기술도입의 대상 분야를 生産財 부분의 자본집약형 기술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비재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부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세번째 쟁점은 기술도입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기술도입은 외화실약과 국내 R & D, 제조능력의 향상을 연계시키기 위해 하드웨어보다 제조기술을 포함한 노우하우를, 턴키플랜트보다 주요설비의 선택적 구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같은 논쟁은 1979년 말에 개최된 全國進出口工作會議에서 향후 기술도입 방침이 결정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즉 기술도입의 중점은 농업, 섬유산업 등 취약한 부문에 두며, 老朽設備의 개조에 힘쓰고 플랜트 설비의 도입을 억제하고 노우하우와 제조기술 도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상의 방침이 결정된 후 플랜트설비 도입중심의 상황이 변화되는 등 최근의 기술도입현황은 1978년 이

(25) 白權錦, 전제서, pp. 48—65.

(26) 小島麗逸, 中國の經濟と技術, 勁草書才, 1982. pp. 325—348.

〈表 11〉 中共 技術導入實績(1950—79년)

	제 1 기 1950—59년	제 2 기 1963—66년	제 3 기 1973—77년	제 4 기 1978—79년	30년 합계
導 入 總 액 (억달러)	27	3.02	35	79.9	144.9
플랜트	24(89%)	2.8(91%)	31.5(90%)	76.1(95%)	134.4(93%)
프로젝트 (件)	233	80	220	145	
도입총액/수입총액 (%)	18.8	4.2	10.3	30.1	17.7
도입총액/기본건설투자 (%)	7.4	1.4	3.9	13.4	6.5
産 業 別 比 重 (%)					
에너지	36.8	10.8	18.8	24.7	25.2
{ 石油	{ 2.9	{ 5.8	{ 2.0	{ 1.7	{ 2.1
{ 石炭	{ 4.5	{ 5.0	{ 3.0	{ 11.5	{ 8.0
{ 電力	{ 29.4	{ 5.0	{ 13.8	{ 11.5	{ 15.1
철강 (비철포함)	22.9	31.7	20.1	26.1	24.1
화학	5.6	28.1	26.2	29.1	24.0
경공업 (섬유)	4.3	16.7	24.5	9.2	12.1
기계공업	(1.6)	(11.7)	(23.5)	(7.5)	(10.3)
군사공업	11.3	10.9	3.1	1.1	3.7
건설재료공업	11.8	—	5.6	6.3	7.0
수송	2.6	—	0.2	1.6	1.5
농업, 임업, 수렵	0.5	—	0.9	0.5	0.6
기타	0.7	—	—	0.1	0.2
	3.5	1.8	0.6	1.3	1.6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産業研究院，共産圏經濟 제 2 권 제 3 호，1985. 9. p. 31.

전의 상황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²⁷⁾

첫번째로 기술도입 방식이 다양화된 것을 들 수 있다. 1978년 이전에는 주로 플랜트설비 도입에 의해서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1979년 이후 라이선스貿易,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共同生産 등의 방식으로 제조기술 소프트웨어기술의 도입이 확대되었다. 「中共經濟年鑑」에 따르면 1978년 이전의 플랜트설비 도입비중은 90%이었으며 라이선스무역 등의 방식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중은 2.3%에 그쳤다. 1979—83년 5년 기간중 플랜트 설비의 도입비중은 53.7%로 줄어들었으며 소프트웨어 도입비중은 46.3%로 증대되었다. 1984년의 플랜트설비 도입비중은 40.1%로 더욱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을 위한 외환사용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로 대형 플랜트 설비의 도입은 감소되고 기술회사의 기술개조와 기술전보에 유용한 中小項目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52—78년 기간중 연평균 기술도입 건수는 30.4건인데 비하여 1979—83년 기간 중에는 1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984년에는 340건이었다. 1건 도입당 평균 외환사용액은 1978년 이전의

〈表 12〉 최근의 기술도입 현황(1980--83년)

년	도	1980	1981	1982	1983
건 수 (件)		82	51	102	212
金 額 (百만달러)		2,130	298	360	560

資料：「中國經濟年鑑」，1981. 1982. 1984년도피.

(27) 白橫鐵, 전세기서, pp.20--31.

1,775만 달러에서 1979—83년에는 821만 달러로, 1984년에는 281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에 사용된 평균 외환은 1978년 이전에 692만 달러, 1979—83년에는 184만 달러, 1984년에는 160만 달러이었다. 평균사용 외환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시 부수된 기계, 기구 설비가 감소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세계로 들 수 있는 것은 기술도입선의 확대이다. 기술제공 국가는 약 40여 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약 70%는 일본을 비롯한 서독, 미국, 영국,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 제공 국가를 보면 미국을 위시하여 서독, 일본, 영국, 프랑스로부터 약 86%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 총 건수의 56%이며, 서독, 영국은 약 40%, 일본의 경우는 26%로 낮은 편이다. 35년간 총 기술도입 건수 중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 비중은 약 30%이며, 1984년에는 약 60%로 높아졌다. 선진국의 기술무역 중 80% 이상이 소프트웨어 기술인 것을 감안할 때中共의 소프트웨어 기술의 도입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네제도 기술도입의 장구가 넓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8년 이전에는 기술도입 창구가 中國技術進口總會公司, 中國機械進出口總公司, 中國儀器進出口總公司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1979년부터 對外開放에 따른 새로운 상황과 기존기업의 기술개조 및 기술진보의 요청에 따라 중공은 1979년부터 관련 부문에 전문적인 工貿公司 등을 통하여 기술도입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자 지역에 기술도입 업무를 관장할 分公司를 발족시켰으며 國務院은 鞍鋼, 首鋼, 武鋼, 馬鋼, 北京燕山石化, 上海金山石化 등 일부 대기업에 자체적으로 기술도입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하였다.

최근에 개척된 黨 12期 4中企會, 5中企會 등으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鄧小平體制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對外經濟技術交流와 對外協力을 확대하는 것이 일찍이 임장이므로 技術專人의 폭은 확대된 기이다. 國家計劃委員會에 따르면 1983—85년 기간 중 약 3,000건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기업을 개조된 예성이었으니, 이에 1983—84년 2년간에 2,220건을 이미 도입하였으며, 1985년의 통계는 발표되기 않고 있으나 당초 3,000건의 기술도입 목표는 초과 달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以上の 論한 資本 및 기술도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점들은 크게 法制的 문제점과 構造的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사는 法律이나 그 밖의 制度的 장치가 미비하다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社會主義리는 중공의 사회경제 체제의 본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²⁸⁾

法制的 問題點의 內容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利權의 송금 및 외환관리 문제가 등장하는데, 1983년 9월 공포된 「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의 외환관리제항에는 “……국내 판매를 위주로 하여 외화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되는 省·自治區·直轄市의 人民政府 또는 國務院 7.管部門의 유보하고 있는 外貨 자금으로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해 주고 그래도 불가능한 경우 對外經濟貿易部의 심의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편입하여 해설한다.”⁽²⁹⁾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中共의 外換 사정에 따라서 중공측에 의해 상당히 자의적으로 적용된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본과 기술을 대여하는 기업들 추에서는 커다란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그 밖의 法制的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原料의 조달문제, 노동력과 고용문제 補償貿易의 문제점, 合作生產方式의 문제점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中共의 對外開放 여사가 짧았고 급히 서두르는 데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문제 해결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權限의 重複 문제들 들지 않을 수 없다.中共의 관료조직의 복잡성과 권한의 중복 등은 1982년부터 실시된 對外經濟 관련 組織機構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의 자본·기술제공측은 불필요한 진경은 보게 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유발된다.

제외배분 제도의 문제점도中共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즉中共에서는 주요 분야에 대하여 국

(28) 白繼顯, 中共의 資本 및 技術專人推移의 展望, 진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5호, 1985. 3. p. 84.

(29) 「月刊 共産圈 經濟動向」, 제1권 제5호, 1983. 11. p. 116 참조.

가계획에 의거 계획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 투자기업 및 기술제공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 그들 나라에서보다, 또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투자를 할 때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의 수반을 의미한다. 더우기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지리적인 수송체계가 미비한데 필요한 물자란 中共 국내에서 공급받는데 행정절차에 의해 지연되는 것은 선진자본 기술국이 투자에 앞서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이다.

여기에 연하여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二重指導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중공의 국영기업들은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2중 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투자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체제 때문에 對外經濟貿易部の 外國人投資管理局은 사전에 지방정부의 승인을 포함하여 완벽한 거래조건을 갖추도록 계약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각국(특히 초기에는 자주)지방정부의 관련부처와 외국기업이 직접 추진했던 투자 및 기술협약이 中央政府의 결재과정에서 몇가지 서류결재 문제로 좌절된 경우가 있다. 분제 해결은 中共의 사회주의 환경에 있으나 이 문제 역시 빈번한 자본이진 및 기술이진 세력에 의해 새로운 절차상의 방법이 모색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中共의 기술 및 외자도입 정책은 경제개혁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제 6차 5개년계획(1981-85)이 끝나는 1985년까지 개혁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고도성장정책을 실시하리 했으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전문기술 인력의 부족이라는 두가지 취약점 때문에 고도성장 정책은 1990년 이후로 미루고 있다. 그러므로 중공은 제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90년까지는 개혁과 조정을 기조로 하는 외자 및 기술의 적극 유치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사료된다.

3. 經濟特區의 設置

국가마다 명칭이 약간씩 다르나 自由貿易地區 또는 加工輸出區라 함은 그 설치 목적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즉 유한한 국내자원을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정부가 기초적인 토지개발과 사회간접자본 및 부대시설을 투자하고 이 특정지역 안에서는 행정관리 및 재정에 관련된 조치들을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外資企業 및 국내기업을 유치하여 무역확대를 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가공수출구 설치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개 정부재정수입의 증대, 수출확대 및 디각화, 고용기회의 소득증대, 선진과학 및 기술도입 등으로 공통점이 많다.

中共의 經濟特區 설치 동기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中共은 국제적으로는 1949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로부터 무역협동을 봉쇄당했고, 국내적으로는 自力更生을 경제건설의 지도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오랜농안 자금자축식의 공업화 방식을 채택해 왔으며, 이것은 수입내체적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레나 10년에 걸친 文革이 끝나고 美·中共 관계정상화 이후 1978년 三中全會에서 경제개혁정책이 채택된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 활동의 중점방향 가운데 하나가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 지불능력의 강화와 계획성 있는 선진기술 및 외자유치, 나아가서는 고용확대를 목표로 지급자축에서 수출우선제 확대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中共은 앞으로 수입내체와 수입외체의 두가지 신탁을 결합시킨 경제특구 운영을 진행시킬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내륙지역의 경우 공업의 기반은 역하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한편으로 교통·통신망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입내체 방식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이 적합하다. 반면에 인안지역의 경우 에너지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구가 조밀하여 노동력이 풍부하고 공업기반은 내륙보다 양호하며 해운·항만의 조건도 좋기 때문에 수출확대 방식에 의한 경제발전 전략의 실시가 용이하다. 따라서 중공은 인안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수출확대를 가속화 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중공의 경제특구는 다른 개도국의 자유무역지구와 나뉘지 않으나 구체적인 복고와 경기적인 목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중공의 경제특구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중공은 경제체제개혁을 특구內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나시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지방에서도 무리없이 보편적으로 개혁이 시행되도록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개도국의 자유무역지구가 갖고 있지 않는 중공 경제특구만의 특징인 것이다.⁽³⁰⁾

이상의 경제적 목표 이외에도, 중공의 경제특구 설치 목적에는 정치적인 특징도 포함되어 있다. 즉 경제특구를 발전시켜 장래 홍콩·마카오의 주권을 회복하는데 있어 특구 운영을 그 형식 모델이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것을 대만 통일전략을 위한 장기적인 포적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상 세가지가 중공 경제특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특구지역과 관련하여 후술하겠다. 여기에서는 경제특구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1979년 9월 당시 중공 부총리 谷牧은 일본을 방문하여 중공이 廣東省의 深圳, 珠海 2개 도시에 경제특구를 설립할 계획임을 처음 밝혔다. 그해 12월 廣東省과 福建省에 경제특구 설치계획이 구체화되면서 立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1980년 4월 廣東省經濟特區條例가 공포되면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廣東省의 深圳, 珠海, 汕頭와 福建省의 廈門島 등 4개의 경제특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을 간단히 살펴보자.

(1) 深圳經濟特區: 총면적 327.5 km², 홍콩 九龍반도에서 40 km 거리, 교통편은 국내 연계보다 대외연계가 잘 되어 있고 良質의 노동력 풍부, 海運 및 공항로선도 홍콩과 직통이 가능, 현재 중공 당국은 홍콩을 통한 외자유치를 적극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工業·商業·農業·목축업 및 주택 레저사업까지 한꺼번에 건설할 필요를 느끼고 종합형 경제특별구를 개발할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음.

(2) 珠海經濟特區: 원래 면적이 6.81 km²이었으나 현재 20여 km²로 확대중, 마카오와는 육로로 연결, 홍콩까지의 해상거리는 36해리, 深圳特區와 마찬가지로 綜合型 特區로 개발할 계획, 현재 국내로 통하는 철도는 없으나 20 km² 확장과 함께 교통망 확장을 제 1로 계획하고 있음.

(3) 汕頭經濟特區: 3개의 지역을 포함, 즉 龍湖加工區(1.6 km²)은 전자·화학·방직·의류·식품 등 공업 위주, 東南部 지역은 19 km²로 農業開發區, 正南部 지역은 1.69 km²로 港口지역, 홍콩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약 187해리(왕복 10시간 거리) 홍콩, 싱가포르, 日本, 英國, 덴마크 등으로 통하는 항로가 개설되어 있음.

(4) 廈門經濟特區: 면적 2.5 km² 방직, 정밀공업, 화학, 수공예 제조업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

이들 4개 지역의 특징은 ① 沿岸地域으로 항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② 기본건설시설 특히 국내로 통하는 교통연계가 매우 미비하고, ③ 화교 및 해외 교민들의 고향이고 홍콩·마카오와 근접 거리이므로 화교들의 풍부한 자금 및 홍콩에 주재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과, ④ 홍콩은 물론 대만 금문도와 마주하고 있어 정치적인 요인이 고려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⑤ 中共의 경제특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특히 면적이 넓다. 深圳特區의 경우 홍콩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되는 327.5 km²로 이와 같이 넓게 설정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특구의 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⑥ 특구 당국이 특구내의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기술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 기업의 참여 및 투자도 中央政府의 사전 허가 없이 특구 당국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이는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적어도 특구내에서는 자본주의 방식에 의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中共의 經濟特區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인 効果 및 문제점을 일러보자

(1) 中共 沿岸省에는 다량의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고 있어 加工輸出地區를 개발하여 勞動所得을 창출해 내기가 쉽다.

(2) 경제특구의 설치는 경제체제개혁을 실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3) 특구내 산업은 비록 그 인관 효과가 크나고 하더라도, 「外部 封鎖區」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의 가속적 실현은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경제특구가 외부 봉쇄적 특징을 갖는 이유는 ① 교통망이 국내보다 해외(주로 홍콩) 쪽으로 편리하게 이어져 있으며 ② 특구내의 빈적은 넓으나, 原料工業의 水準은 낙후되어 있는 상내에서 노동력(그것도 대부분 미숙련 노동)만 풍부할 뿐 아니라 ③ 특구내에서 소비 행위가 가능한데 이는 외화소득 창출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³¹⁾

(30) 中華經濟研究院, 「中共 經濟特區에 관한 研究」, KIET 번역시리즈 제54호, 1985. 6. pp. 38-42.

(31)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自由貿易區는 區域內에서 소비행위 또는 일반인 거주가 극시점으로써 구역내 생산품의 보세기

(4) 中共側 전망으로는 4個 특구의 개발이 완성되면 28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리라 하는데, 이는 신규 취업내상자의 4%에 지나지 않아 특구만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5) 외자도입은 전체적인 자본형성면에서 그 공헌도가 크겠으며 외국인 기업의 진출 및 홍콩과의 인접 등의 요인으로 판매기술과 국제정보 시스템 등을 습득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투자환경 마련 과정에서 과도하게 홍콩의 영향을 받아 외자도입선의 다변화 위축과는 반대로 홍콩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특구체도의 발전 및 싱공여부가(특히 深汕의 경우) 홍콩 경제의 실패에 좌우되게 된다.

(6) 국민 소득 증대에 대한 기어는 직접적인 성료론 통한 소득발생분에 그칠 것이다. 경제발전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 기간의 특구내 기업 활동이 필요하며, 특구내 생산활동과 특구외의 연계 관계가 유기적으로 밀접해야 하는데 노동력의 인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인계가 미비하다.

일반적으로 홍콩의 특구환경 가운데 평복입급과 기업소득세를 제외하면 다른 아시아 지역의 외자 유치보단 유리한 점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中共의 경제특구가 본 체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내 부존자원, 수송, 행정면에서 국내 지역과 특구간의 연계가 촉환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²⁾

4. 貿易管理制度的 改革

1978년 中共이 對外開放을 발표하면서 위한 貿易制度改革의 主要骨子는 종전의 국가에 의한 무역 독점 체제를 철폐하고 省, 市, 自治區에 貿易自主權을 인정한 것이다. 貿易自主權이 본격화 된 것은 지난 1984년 9월 15일 中共 國務院이 對外經濟貿易部가 상정한 「對外貿易制度的 改革에 관한 意見報告」를 승인, 그 실시를 통달함으로써이다.⁽³³⁾

우선 이와 같은 최구의 무역제도 개혁의 배경을 알아보자.⁽³⁴⁾

첫째, 대외무역 활동에 대한 행정관리 권한이 무역부 이외에도 각 工業部나 지방 정부에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역활동을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계획,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관리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와 국가 무역관리 체제상의 혼란과 중복을 야기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기업들이 내부분 중앙 주부처와 지방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체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해결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무역기업의 만성적인 적자현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中共의 무역구조상의 문제이다. 즉 수출의 경우, 中共의 무역 기업들은 국내 제조업자로부터 수출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수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출품 제조업체를 선택하는 과정은 무역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우수한 조건을 제시하는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계획된 수출분량에 의거, 상부 주부처나 정부기관이 지정하는 업체의 새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해외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제품 생산의 유인이 적다. 결국 이러한 수출 여건의 부담은 수출용 제품을 자기 계정으로 구매한 무역기업들이 지게되어, 내부분이 국영기업인 무역기업의 재정부담이 한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셋째, 工貿結合이나 工廠企業과 販賣企業의 인계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무역관리 권한의 分化와 行政部門과 신하 유관기관의 未分離의 두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상급 정부기관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가장 합리적인 企業結合이 저해되고 있음은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등장한 개혁의 主要內容을 알아보자.⁽³⁵⁾

첫째, 行政과 企業의 分離이다. 이 원칙은 무역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영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

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제특구의 경우 특구내의 거주 및 생산물 판매, 소비를 비교서 넓게 허용함으로써 특구 인근 지역의 노동력 흡수를 유인하고 있다. 이는 노동수요 증대 및 고용 효과는 있으나 외화 획득면에서는 크게 이득나는 조치로써 어느 정도 본 체도에 오르면 보세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32) 中華經濟研究院, 전계서, pp.91-81.

(33) KJET 공산권 연구 제2권 제3호, 「1978-83년간 소싱기간 홍콩의 대외무역」, 産業研究院, 1985. 9, pp.144-150.

(34) 申泰容, 「中共의 貿易管理體制 改革에 관한 研究」, KJET 연구분서 제7호, 한국산업경제기술훈구원, 1982. 3, pp. 23-28.

(35) 申泰容, 전계서, pp.33-53.

소한의 규정 준수 이외의 기업활동에 행정기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무역기업에 국한하여 설명하면, 무역기업의 기획, 재무, 인사 등 제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전문화되고 경제원칙에 의해 움직여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업 실제로 독립시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물론 자체적인 고정자산권 유동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獨立採算別에 의한 損益責任單位로 움직여지게 된다.

中共이 기대하고 있는 行政과 企業의 분리원칙의 완전한 실행은 결국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나 집단에게 있는가 아니면 일반투자 내중인 자본가에게 있는가 만이 다름뿐 자본주의 세계의 표현에 따르면 “所有와 經營의 分離” 원칙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輸出入代理制의 實施이다.

배경 설명에서 지지했듯이 무역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면서 수출품 제조업체와 수입 동종품의 국내 제조 기업에게 정당한 경쟁력과 수입 역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수출의 경우는 물론 수입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分配制가 채택되어 대부분 수입상품의 분배가 거의 원래 수입 가격보다 낮거나, 때로는 국내 협의가격보다도 낮았다. 심지어는 국내의 동종 상품에 비하여 품질이 원등히 우수한 수입상품의 경우에도 그 가격은 동일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와 같은 가격 체제는 결국 국내 관련 업체의 생산 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기업의 경영 개선이나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의욕을 감퇴시키는 분배제를 야기시켰으며, 무역 기업으로서도 막성적인 적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로 가져 오세 하고 나아가 국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 貿易計劃體制의 改革이다.

수출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指令性 계획을 적용하였던 것은 바꾸어 經貿部가 단지 계획 수출금액을 하달하고, 소수의 국가 계획이나 민생과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계획 수출 물량을 지시하는 제세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전자를 指導性계획, 후자를 指令性 계획이라 한다. 그리고 經貿部는 종전과 같이 다시 購買計劃과 分配計劃을 작성, 하달하지는 않는다.

수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외화자금으로 수입하는 것과 소수의 大宗商品 및 주요 플랜트 설비의 수입 그리고 국가간 무역협정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經貿部가 국가 계획에 의거 무역 총공사를 지정 그 수입을 지시한다. 이것은 지령성 계획이다. 나머지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상품 및 항목별 수입계획을 하달하지는 않고 단지 수입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외화 한도 표준액이나 수입 쿼터를 수요자나 수입 부문에 통지해 준다. 그리고 실제 수입업무는 무역 기업에게 수입을 위탁하거나 무역 환통 권한이 있는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지체적으로 수입하는 등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로이 위탁받은 수입에 대해서는 專門貿易總公司 역시 지도성 계획에 따라 수입할 수 있다.

넷째, 貿易企業의 財務面에서의 개혁이다. 이것은 비단 무역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利改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³⁶⁾ 즉 기업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으로부터도 독립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며, 독립된 손익 계산 단위로써 운영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것은 기업을 사회, 경제적인 독립체로 운영해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 가운데 보완적인 생각은 딱 하나의 조치인 것이다.

나섯째, 1. 貿易結合과 技貿結合의 적극적인 확대 실시이다.

1. 貿易結合과 技貿結合은 이미 1978년의 첫단계 개혁 이후부터 시험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소속 관계에 의하여 기업간의 자유로운 결합이 장애를 받아 왔다. 이것이 소위 「塊塊條條의 問題」이다. 즉 지명간(塊塊), 部門간(條條)의 단결과 利害對立 등이 가상 합리적이고 최적 상대인 工貿結合이나 技貿結合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行政과 企業의 分離 및 수출입 대려세의 실시로 제조 기업과 무역 기업들 사이에 자유 의사에 의한 자발적의 工貿結合 혹은 技貿結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中共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시장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 및 무역 활동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해외 기술의

(36) “利” 즉 이익 징입제를 “稅” 즉 조세 납부제로 개혁하는 것.

도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무역관리 제도의 개혁에 따르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중공 내부에 개혁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鄧小平, 趙紫陽 세력은 그 “절박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제도의 개혁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두가지 측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혁의 폭이 넓고 깊이 또한 깊다. 따라서 개혁 세력이 추진하는 무역제도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각급 단위의 대외무역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모든 인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개혁 과정에서 자자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외개방의 확대 분계가 중공 경제부분 상충지도부 내부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등장해 왔던 것과 내외경제 활동 부문은 둘러싼 경제사범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무역제도의 개혁은 대단히 야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행정과 기업의 분리로 경영주체의 부재가 가져 올 또 다른 문제점의 등장이다.

중공은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所有와 경영”의 분리 논리로 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기업 경영 방식이 기업가(所有者) 경영에서 주식시장 메카니즘의 발달로 전문경영으로 변화하면서 所有와 經營이 분리되는 현상에서 假借한 것이다. 양자의 차이점은 소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데 있다. 즉 전자는 기업의 소유권이 국가(全民所有)에 있고, 후자는 일반 주식투자자에게 있다. 후자의 경우는 소유집단이 주총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직·간접으로 통제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勞働者·職工自主管理制度」가 도입되어, 이 기구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주총 이상으로 깊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工業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기업이나 工貿結合企業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결국 經貿部와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정부의 무역청(혹은 위원회)이 이러한 기능의 일부를 무역관리 기능을 통하여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효율적인 관련업무 수행여부가 관心の 대상이다.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최근의 무역제도 개혁이 미치게 될 방향을 생각해 보면, 우선 중공의 수출 활동이 더욱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輕·紡織工業製品과 전략수출 품목인 電動機械類의 적극적인 수출 활동이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는 대외창구로서의 國營對外貿易專門公司들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입 수요자인 국내 생산기업이 자체 수입 수요 품목에 대한 수입의사 결정과정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³⁷⁾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최근 중공 무역제도 개혁의 성패는 효율적인 무역 활동의 관리 체제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개혁에서 무역 기업의 거래지 기능면에서의 권한은 본질적으로 확대시키고 무역 창구도 부문별, 지역별로 제조기업에게까지 확장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Ⅵ. 展望 및 韓國經濟와의 관계

以上에서 논한 경제개혁안은 中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개혁의 세부지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자본 및 기술도입은 자본선진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므로 개혁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다만, 개혁이 실패할 경우 實用主義者들의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冒險性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일단 종합적인 개혁안이 하나의 公式文件으로 表出된 것은 실용주의자들의 권력기반이 더욱 공고히 했다는 징후라는 판단을 토대로, 적어도 당분간은 경제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선제하에서 몇가지 개혁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과 전망을 논하기로 한다.

첫째,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개혁안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노동자의 적극성, 창의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효율이 提高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경제개혁의 관건은 앞으로 中共의 가격체계가 여하히 合理的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앞서 경제개혁의 내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中共이 결코 계획 경제체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 만큼, 각종 經濟計算의 근거로서 價格이 어떻게 算定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혁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37) 申泰容, 전제서, pp. 80—83.

이다. 이지도 中共에는 ① 工業製品과 農産品 사이의 부당한 가격 격차를 비롯하여 ② 에너지 가격 사이의 격차(석탄이 전리, 原油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다), ③ 석탄, 철강석 등의 原燃料은 낮은 가격이나 鋼材, 기계제품은 높은 가격이다. ④ 중공업 부문의 가격이 경공업 부문의 가격보다 훨씬 높다. ⑦ 수입품과 국내 제조품의 比價가 불합리하다는 등 허다한 가격체계의 불합리한 상태를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고쳐 나간다는 것은 기행착오를 여러번 겪게 될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세제,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위험성 문제이다.

특히 나쁜 개도국에 비해 엄청난 인구를 소유하고 있고, 그 많은 인구의 높은 문맹율과 1차 산업 위주의 현 경제체제 하에서는 다른 개도국(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生産性 관련지표들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 압력을 생산성 향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수반할 것이며, 따라서 악성 인플레이의 요인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성패의 큰 요인일 것이다.

예를, 국가 계획을 초과 달성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주적인 판매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기업이 생산량을 둘러싼 企業과 行政機關 사이에 協商力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요물자에 대해 계획을 放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생산량의 책정단계에서 기존 생산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수준의 생산량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의 의사를 이례한 결정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업 자주권의 폭은 가변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다섯째, 개혁조치의 실시에 따라 생산 활동이 자극되고, 임금인상의 효과 등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될 것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득격차가 나다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 심리의 함께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대외 개방의 적극적 확대로 美·日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 및 자본·기술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자본·기술도입이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개도국의 경우에서처럼 국제 채무국으로 전락하거나 선진 자본국에 예측되는 경제체제로 변색될 우려가 없지는 않다. 물론 과거 19세기에 도 그랬지만 워낙 넓은 국토와 방대한 인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中國의 민족주의가 이를 배격하고 있으나 자본의 위력은 항상 조심심 있는 경제정책을 요하고 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았다.

中共의 경제체제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은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적 요소와의 접목에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공 경제가 대내적으로는 경제효율의 극대화를, 對外的으로는 무역 및 기술·자본의 교류 확대를 진행시키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와 中共과의 관계에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심화라는 측면과 교역 가능성의 증대라는 측면을 동시에 提示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韓-中共間의 경제교역에 관하여 논하려면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한-중공간의 관계론 특이하게 단드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의하여 자료의 입수 및 발표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四人幫 축출을 전후하여 제 3국(주로 홍콩)을 경유한 삼각무역일 망정 교역은 존재하여 왔고 또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 北韓의 中共에 대한 강력한 항의 및 北韓의 對 소련 접근을 무리한 中共當局의 정책진환으로 한때 한-중공간의 교역은 미비할 정도로 떨어졌다. 다행히 1983년 5월 5일 중공 민항기 불시착 사건 이후 교역은 다시 급속히 커지고 있으나 1980년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로 정확한 통계수치는 알 수 없다. 다만 농산물 한약재 등이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T.V. 냉장고, 세탁기, 철강재, 시멘트, 가구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계속 상딤이 진행되고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의 <表 13>은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이 집계한 홍콩을 통한 한-중공 교역 현황이다. 여기에 의하면 셋째 교역량 자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물

〈表 13〉 홍콩을 통한 韓-中共 교역현황(단위: 홍콩 달러)

	1982	1983	1984	1985(1月-3月) 1984(1月-3月)	1985(1月-6月) 1984(1月-6月)
수 입	569, 013, 967	839, 224, 924	1, 444, 694, 972	761, 058, 362 203, 442, 753	775, 706, 839 712, 233, 734
수 출	338, 224, 649	327, 302, 509	1, 254, 113, 388	410, 563, 220 345, 014, 328	1, 725, 876, 769 407, 257, 802

資料: STATISTICS OF KOREA CHINA TRADE THROUGH H. K. 홍콩주재 한국총영사, 1986. 2.

제 수입의 증가율보다 수출의 증가율이 높아 1980년대 중반부터는 수출 초과가 예상된다는 길이나. 머지 않아 한국 정부의 보도 세한이 풀리면 자세한 외화 가득을, 품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서-오린이론에 의하면 한-중공은 勞動賦存鼠의 過多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진다.⁽³⁸⁾ 실제 섬유, 조선공업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인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³⁹⁾ 제품 수명 이론에 의한 기술경쟁에서는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 우리가 다소 앞서고 있는으나 이 역시 中共의 주위-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전통적인 국제 경제이론에 의하면 中共經濟의 국제무대 진출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일단 위협적인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一國과 他國과의 工業品간 무역량은 貿易依存度(=무역량/국민소득)로써 따져보면 무역거래국의 수요 패턴이 밝을수록 많아진다」는 代表的 需要理論⁽⁴⁰⁾을 근거로 한-중공간의 교역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무역 정책을 바르게 추진하면 中共經濟의 對外 개방이 우리에게 큰 잇점으로 작용하리라고 본다. 특히 歷史, 文化, 民族性의 유사성과 지리적인 근접 능 相互流通可能性을 전제로 할 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의 국제적인 행사와 버지 않은 강령에 획기적인 국교정상화의 가능성을 예상할 때, 신진 개도국으로써의 한국 경제성장 모델을 연구하는 중공 당국의 입장에서는 교역량의 대폭적 증가와 자본-기술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신진 차기세대의 자본-기술보다 그것에는 못미치나 한국 경제 선무가의 실체적이고 체험적인 자문도 많이 필요로 하리라고 보며, 前述한 경제특구의 운영면에서 특히 그러한 자문의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 우리로서는 단순히 무역경쟁국 내지 교역 상대국으로써의 中共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면에서의 中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日本貿易振興會, 中國とアセアン諸國の經濟・貿易關係の現狀と展望,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97. 昭和 55年.
2. _____, 中國の經濟調整の實情と今後の行方,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183, 昭和 56年.
3. _____, 解説・中國經濟統計,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223. 昭和 58年.
4. _____, 中國沿岸 11省都市の經濟,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227. 昭和 58年.
5. _____, 中國データ・ファイル, 1983,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236, 昭和 58年.
6. _____, 中國・地域經濟の評價,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240, 昭和 59年.
7. _____, 中國の對外經濟活動, JETRO 海外調査シリーズ, No. 242.
8. _____, CHINNA NEWSLETTER. No. 48- 50, 1984.
9. 國際經濟社, 國際經濟 中國特集(臨時增刊) 200號, 1980.

(38) 金仁煥, 國際經濟論, 제 13집, 要素賦存度의 해시-오린理論, 泰山出版社, 1985. 2. pp. 327-330.

(39) 金益洙, 「韓-中共 핵심 부문 수출경쟁력 비교」, KIEP 共産國經濟 제 2권 제 1호, 1985. 3. pp. 62-89.

李相圭, 「한국-일본-대만-중공의 조선공업 비교분석」, KIEP 연구보고서 제 33호, 1984. 3.

(40) S. 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Columbia Univ. Press, 1961.

박병호, 이시환 공저, 貿易子概論, 1982, 經文社, p. 164.

10.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0年代の 中國經濟, 昭和 55年.
11. 小島麟逸, 中國の經濟と技術, 勁草書房, 1982. 2.
12. 大塚恒雄, 中國經濟と勞動力問題, 白桃書房, 1982.
13. 尼上悅二, 中國經濟入門, 門東洋經濟新報社, 1983.
14. 近藤康男, 現代中國經濟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81.
15. 日本貿易振興會, 圖みてる中國經濟, 1980.
16. 産業研究院, 季刊 共產國經濟, 제 1권 1.2.3.4호, 제 2권 1.2.3호 1984. 1—1985. 9.
17. 李相圭外, 「韓國·日本·대만·中共의 造船工業 比較分析」, KIET 연구보고서 제33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3.
18. 盧熙穆, 「成熟期の 美·中共 經濟交流」, KIET 연구보고서 제41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4. 4.
19. 白權鎬, 「中共의 資本 및 技術導入推移의 展望」, KIET 연구보고서 제45. 한국산업연구원, 1985. 3.
20. 中華經濟研究院編, 白權鎬譯, 「中共의 經濟特區에 관한 研究」, KIET 번역시리즈 제54호, 산업연구원, 1985. 6.
21. The China Quarterly 編, 沈成燮 金益洙譯, 「調整期の 中國經濟」, KIET 번역시리즈 제65호, 산업연구원, 1985. 12.
22. 産業研究院, 「中共·日本の 경제 교류의 전개과정과 현황」, KIET 지역정보시리즈 제13호, 1984. 10.
23. _____, 「中共의 最近 投資環境變化」, KIET 지역정보시리즈 제15호, 1984. 11.
24. _____, 「中共의 經濟改革 現狀과 展望」, KIET 지역정보시리즈 제17호, 1985. 4.
25. 申泰容, 「中共의 貿易管理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KIET 특수분석 제 7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1982. 3.
26. 韓國貿易協會, 「中共市場案内」, 198. 7.
27. _____, 「中共의 經濟關係 法令」, 1985. 9.
28. 朴炳鎬, 李時煥, 「貿易學概論」, 經文社, 1982.
29. 金仁垸, 「國際經濟論」, 茶山出版社, 1985.
30. S. 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Columbia Univ. Press, 1961.